

제4차 아베 내각 출범과 일본 정국 전망

조양현



이 글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에서 매주 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 세미나에서의 논의를 참고로 하여 저자가 작성한 것입니다.

세미나일자 2017. 9. 4.

발 표 조양현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

토 론 박명희 일본연구센터 교수

이면우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조현선 동북아1과 외무사무관

발 행 일 2018년 1월 16일

발 행 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편 집 김기선 연구원

디 자 인 역사공간

발간등록번호 11-1261021-000001-03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우)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http://www.ifans.go.kr>

E-mail: ifans@mofa.go.kr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제4차 아베 내각 출범과 일본 정국 전망

CONTENTS

문제의 제기	01
2017년 중의원 선거 분석	03
일본 정치에의 영향 및 함의	06
2018년 정국 및 주요 이슈 전망	09
정책적 고려사항	13

1. 문제의 제기

» 2017년 12월 26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제2차 내각을 구성하여 정권에 복귀한지 만 5년이 되는데, 동년 10월 22일 총선거에 대승하여 출범한 제4차 아베 내각은 최장 2021년 가을까지 집권할 가능성이 있음.

- 2012년 12월에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이 민주당에 승리하여 제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한 이래 아베 정권은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 안정적으로 정국을 주도해 오고 있음.

- 자민당은 2017년에 당규를 개정하여 총재의 임기를 2기 6년에서 3기 9년으로 연장한바, 2018년 9월에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가 연임에 성공할 경우 2021년 가을까지 아베의 집권이 가능함.

- 12월 26일 현재 아베 총리의 재임 기간은 제1차 아베 내각(2006년 9월~2007년 9월) 시기를 포함해 2,193일로,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2,798일), 요시다 시게루(吉田茂·2,616일)에 이어 전후(戰後) 3번째로 길며, 아베가 2019년 11월 20일까지 총리직을 유지할 경우 가쓰라 다로(桂太郎)를 제치고 근대 일본이 개국한 이래 최장수 총리가 됨.

-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전의 6년 동안 매년 총리가 교체되는 극심한 불안정을 보였던 일본 정치를 상기할 때, 일본 정치사에서 현 아베 내각의 장기집권은 이례적인 사례임.

» 아베 정권은 지난 5년 동안 5차례의 국정 선거(중의원 선거 3회, 참의원 선거 2회)에서 연승하면서 연립여당이 중·참 양원에서 절대다수를 확보하고 정권기반을 공고히 하였는데, 특히 2017년 10월의 중의원 선거는 자민당 1강 체제의 공고화 및 아베의 초장기 집권의 가시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함.

● 동 선거 결과 집권 여당은 2016년 7월의 참의원 선거로 획득했던 중·참 양원의 절대안정 다수를 이어가고, 자민당은 최장 4년까지 집권 여당의 지위를 연장할 수 있게 됨.

● 뿐만 아니라, 의회 내 개헌 지지 세력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넘어섬으로써 개헌 발의가 가능하게 되었던바, 일본 보수 세력이 염원해 온 평화헌법의 개정이 가시권에 들어옴.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고에서는 지난 10월의 일본 중의원 선거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6년 차에 접어든 아베 내각 하의 일본 정국을 전망하고 그 함의를 검토해 보고자 함.

2. 2017년 중의원 선거 분석

가. 연립여당의 절대안정의식 유지

» 집권 5년 차에 접어든 아베 정권의 연속 실정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북한 위협론에 힘입어 아베 내각이 기사회생하면서 치러진 명분이 부족한 선거였지만, 자민·공명의 연립정권이 헌법 개정안의 발의와 법안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의석 유지에 성공함으로써 아베 정권의 기반이 더욱 공고화됨.

- 2016년 말부터 모리토모 학원(森友学園), 가계 학원(加計学園) 등 아베 총리와 관련된 일련의 의혹, 각료들의 스캔들 및 2017년 7월의 도쿄 도의회 선거에서 여당의 패배 등으로 내각 지지율이 동년 7월에 30% 이하로 떨어져 한때 아베 정권 퇴진론이 제기됨.
- 아베 총리가 8월 3일 내각 개조로 분위기 쇄신을 꾀하고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단호히 대처하는 과정에서 내각 지지율이 50%대로 반등하자, 임기 1년여를 남긴 중의원을 해산하여 10월 22일 총선거를 단행함.
- 자민당은 소선거구에서 4분의 3 이상 당선되어 단독으로 절대 안정다수를 크게 상회하는 성적을 얻고(284석), 아베 내각의 집권 연장에 성공함.

나. 야권 분열에 따른 자민당의 소선거구 압승

» 자민당의 압승 요인은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경기부양책과 신뢰감을 주는 위기관리 태세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평가로 볼 수 있지만, 대표적 야당인 희망의 당과 민진당이 분열하여 소선거구에서 자민당과 3파전을 벌인 결과 자민당이 어부지리를 취했다는 점에서 여당의 실력이라기보다 야당의 실수로 인한 승리라고 할 수 있음.

- 지난 5년 동안 아베 정권 하에서 주가 상승과 고용 개선 등 경제 실적이 개선된 데 대한 평가이거나, 북한 위협에 직면하여 일본 사회가 정치적 안정을 추구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야권 분열을 막기 위해 민주당이 자발적으로 희망의 당과 통합을 선택하였지만,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희망의 당 대표가 보수색채를 선명히 하여 중간 보수층을 끌어안고자 리버럴 계열을 배제하는 선택적 수용의 방침을 밝히면서 민진당 잔류파가 입헌민주당을 창당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야당 표가 분산되어 여당의 압승으로 귀결됨.
- 소선거구 289석, 비례대표 176석, 총 465석을 두고 싸운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전체 소선거구의 75%에 해당하는 218석을 석권하였으며 비례대표에서 38%인 66석을 얻는 데 그쳤던바(비례대표 득표에서는 집권 여당이 2,553만 표, 5개 야당이 2,949만 표로 야당이 우세), 야당 분열에 의한 자민당의 소선거구 독식이 결정적인 승패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음.

다. 입헌민주당의 약진

➤ 선거 결과 여야 제1당 간의 의석 차이는 선거 이전보다 더 확대되어 55석을 얻은 입헌민주당이 284석인 자민당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자민당 1강 체제’는 더욱 공고해짐.

- 제1야당이었던 희망의 당은 의석이 대폭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때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던 고이케 대표의 본거지인 동경에서 1명만 당선되는 등 향후 전국적인 정당으로 세력을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과거 일본유신회의 경우처럼 세력이 쇠퇴할 가능성이 있음.
- 대표적인 야당이었던 민진당은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대표가 사임하는 등 당 존립의 위기에 처함.

● 반면 민진당에서 떨어져 나온 입헌민주당은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 체제 하에서 선전하여 선거 전의 15석에서 55석으로 약진하여 제1야당으로서 향후 정계 개편의 중심세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었지만, 의회 내에서 여당을 견제하기에는 절대적인 열세에 있음.

3. 일본 정치에의 영향 및 함의

가. 아베 정권의 기반 강화

2017년의 일본 정치의 최대 관심사였던 10월 총선거는 ‘아베 일강(一強) 체제’의 공고화로 귀착되었던바, 아베 총리의 초장기 집권이 가시권에...

≫ 2017년의 일본 정치의 최대 관심사였던 10월 총선거는 결국 ‘아베 일강(一強) 체제’의 공고화로 귀착되었던바, 의회 내에서 여당의 절대안정의식, 내각 지지율의 회복, 야당의 분열, 자민당 내 ‘포스트 아베’ 추진 동력의 약화 등을 고려할 때 아베 총리의 초장기 집권이 가시권에 들어옴.

● 총선 결과 중·참 양원에서 연립여당은 3분의 2를 확보하고 자민당은 단독 과반수를 유지하였고, 중의원 선거 대승 및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 등으로 2017년 말에 내각 지지율은 50% 전후까지 회복되었으며, 야당의 대표주자였던 민진당이 3개로 분열되어 중의원에서 자민당의 5분의 1의 의석에도 미치지 못하고 희망의 당 역시 당세확장의 추진력을 상실하여 아베 정권과 자민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쉽지 않음.

≫ 2016년에 특정정보보호법, 안보법제, 소비세 연기 등으로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였음에도 2017년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고 내각 지지율이 회복됨으로써 아베와 자민당은 정국 운영을 주도하고 기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함.

● 야당은 아베 내각에 의한 개헌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전략을 폈지만, 국민의 대다수는 경제 문제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아베 내각의 경제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남.

● 이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개헌 문제를 제외한다면 2017년 11월에 출범한 제4차 아베 내각이 경제, 정치·외교, 의료복지 등 제반 분야에서 정책 재량권을 확보했음을 의미함.

나. 자민당 1당 우위 정당 구도의 복원

≫ 2009~2012년 동안 집권했던 민주당 정부의 실정 이후 야당의 분열 및 난립으로 자민당에 유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자민당 우위의 정당 구도가 더욱 고착되었던바, 민주당 정부의 실패로 인한 비(非)자민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저하 내지는 자민당에 대한 대안세력 부재의 상황이 지속되는 한 일본의 정권 교체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탈냉전 이후 일본 정치에서 ‘55년 체제’(1955년 자민당 창당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되었던 자민당 1당 우위의 정당 구도)가 붕괴되어 1993년에 비자민 연립정부가 구성되었고 2009년에는 민주당 정권이 출범했지만, 이들 시기를 제외하고는 자민당 우위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바, 최근 일본의 정당정치는 과거의 자민당 장기집권 체제 하에서의 ‘1.5 정당제’를 방불케 함.

● ‘55년 체제’와 비교하면 최근에는 복수 정당의 연립에 의한 내각 구성, 일본 정치의 총체적 보수화(보수정당의 약진, 보수 성향의 전후체제 정치가의 부상), 무당파 및 유동성 증가, 파벌 약화에 따른 당 총재의 리더십 강화 등의 변화가 있지만, 자민당 우위의 정당 구도에는 차이가 없음.

다. 소선거구 비례대표제의 한계 노정

≫ 일본 선거에서 소선거구제의 도입은 과거 ‘55년 체제’와 같은 정치 유착을 막고 정권 교체를 실현하는 것(양당제의 정착)이 목적이지만, 이를 가능하게하기 위해서는 ‘2대

소선거구제의 도입은 양당제의 정착이
목적이지만, '1강다약(一強多弱)' 하에서는
제1당에 실력 이상의 의석을 몰아주는
제도적 폐해가...

정당'의 존재가 전제인바, '1강다약(一強多弱)' 하에서는 제1당에 실력 이상의 의석을 몰아줌으로써 1당 지배를 조장하는 제도적 폐해가 부각됨.

● 1996년부터 일본 선거에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의 도입으로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가 용이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현실은 제1당에 의한 장기집권이 계속되고 있음.

● 원래 소선거구제는 지방선거구의 과대 대표성이 시정되어 농촌 중심의 자민당이 불리해지고 정당 및 정책 중심의 투표 경향이 강화되어 민의를 집약하여 선거의 승패를 명확히 하는 기능이 있지만, 이번 총선거를 포함하여 최근 4차례의 선거에서 제1당인 자민당이 소선거구에서 대승하면서도 전체 득표수에서는 과반수를 얻은 적이 없음.

● 이번 총선거의 투표율은 53.68%로 역대 최악이었던 직전 선거보다는 1% 높았지만, 전후 두 번째로 낮았던바, 최근의 투표율 저하 추세는 이러한 제도적 약점을 악화시키고 국민과 정치의 간격 즉, 여론과 의회 의석 분포 간의 왜곡을 심화시킴.

4. 2018년 정국 및 주요 이슈 전망

가. 아베의 자민당 총재 3선 연임 문제

» 2018년 일본 정치의 최대 관심사는 9월에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의 3선 연임 여부인바, 아베가 승리할 경우 전후 최장 총리로 2020년 도쿄 올림픽 주최 총리가 되는 꿈도 달성 가능할 것임.

● 사학재단 특혜 의혹 등으로 인한 정치적 위기와 장기집권에 따른 국민들의 피로 감에도 불구하고 높은 내각 지지율, 안정적인 경제지표, 아베 총리를 위협할 만한

뚜렷한 당내 경쟁자의 부재 등을 감안할 때, 아베의 총재 3선을 예상하는 시각이 우세함.

● 총선 이후 아베 내각의 지지율 회복(총선 이전의 30% 초반에서 11월 40% 중반대, 12월에는 50% 전후로 상승)을 아베 개인에 대한 신뢰회복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론이 남아 있으며, 지난 11월 마이니치(毎日)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아베의 3선에 대해 반수 이상이 반대(35%가 찬성, 53%가 반대)하고 있는 것도 아베에게는 부담임.

» 향후 내각 지지율이 실속할 경우 2018년의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에 대한 도전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아베 총리의 3선을 좌우할 변수로는 북한 문제 동향과 미·중 관계의 변화 등 국제 정세 변화, 입헌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 재편 가능성 및 야당의 쟁점 제시 능력,

2018년 일본 정치의 최대 관심사는 9월에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의 3선 연임 여부인바, 내각 지지율이 실속할 경우 아베에 대한 도전자가 나올 가능성이...

소비세 인상 및 교육·보육 무상화 공약 이행 여부, 내각의 스캔들 발생 가능성, △자민당 내 아베 대항마의 부상 여부 등을 들 수 있음.

●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은 지난 12월에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는 경우에” 무투표로 3연임을 확정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 외에 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 정조회장, 고노 타로(河野 太郎) 외상, 노다 세이코(野田 聖子) 총무상 등이 출마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나. 아베노믹스의 향배

≫ 지난 5년 동안 아베 내각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결과, 금융완화와 재정 확대가 연화 약세, 기업 활동의 회복 및 주가 상승 등의 결과로 이어진 반면,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소비와 규제개혁 및 사회보장 분야의 개혁 등에서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재정 건전화 문제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음.

● 아베노믹스의 결과, 일본의 설비 투자액은 71.9조 엔(2012년)에서 83.6조 엔(2016년), 세수는 43.9조 엔(2012년)에서 59.1조 엔(2018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증가하고, 구직자 대비 일자리 비율을 의미하는 유효구인배율도 2012년 12월 0.83에서 지난 10월 1.55로 증가함[닛케이(日本經濟)신문, 2017.12.24.].

● 일본 정부의 장기 채무는 2012년 932조 엔에서 1,108조 엔(2018년 예산안 기준) 수준으로 증가한바, 2019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추가 인상,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액 감소 등이 예상됨.

≫ 일본 정부는 2018년에도 적극적인 금융·재정정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나, 신성장 동력 창출의 한계에 따른 구조개혁의 동력 약화, 세계적인 저성장과 국제경제 질서의 불투명성 그리고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불안 요인 등으로 본격적인 디플레이션 탈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일본 정부는 총액 97조 엔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에 사상 최대의 방위비를 포함 시키고, 특히 아베의 자민당 총재 3선을 위해 유아교육 무상화를 골자로 한 ‘사람만 들기혁명(人づくり革命)’ 등을 구체화하며 경제 재건에 역점을 둔다는 입장임.
- 그러나 2018년에 일본 경제의 대내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구조개혁 및 규제 완화 정책 추진의 한계, △중소기업 인력 부족 심화로 인한 생산력 저하, △경제 재생과 재정 재건 간의 정책 충돌, 육아·의료 등 사회보장 정책의 재원 확대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이 예상되고, 대외적인 요인으로는 △중국의 경기 감소 등 글로벌 신흥시장의 불투명성 및 북핵 리스크 등으로 인한 연화 강세,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미·일 간 환율 및 무역 갈등 가능성, △미국의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탈퇴의 여파 등이 예상됨.

다. 의회 내 개헌 작업의 본격화

» 2018년에는 안정된 내각 지지율, 의회 내 개헌 발의 요건의 성립 등을 배경으로 의회를 중심으로 평화헌법 개정 관련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인 진전에는 난관이 예상됨.

- 2018년에 아베의 총재 3선 여부를 좌우할 최대 변수의 하나는 평화헌법 개정 문제인바, 연립여당 공명당의 신중한 태도, 개헌안에 대한 자민당 내의 이견, 국민 투표에 대한 부담 등을 감안할 때 아베는 총재선 승리까지 신중히 대응할 것으로 보임.
- 아베 총리가 충분한 준비작업 없이 무리하게 개헌을 추진할 경우 국민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고, 아베의 경쟁자들이 아베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임.
- 개헌 관련 각 당의 입장은 적극(자민당, 일본유신회, 희망의 당), 용인(민진당, 공명당), 반대(입헌민주당, 사민당, 공산당)로 구분되지만, 개헌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는 각 당의 입장 차이가 커서 그 합의 도출은 쉽지 않으며, 특히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9조 개헌에 신중한 입장임.

≫ 최근 여론조사(2017년 12월 9~10일, 일본여론조사회)에 따르면 전쟁과 전력 포기를 명시한 헌법 9조(평화헌법)의 개정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가 53.0%인 반면, “필요하다”는 41%에 그침.

● 특히 응답자의 67.2%가 국회의 개헌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답해 “서둘러야 한다”는 28.8%를 압도했고, 아베 내각 하에서의 개헌 추진에 대해서도 53.1%가 반대함.

● 아베는 ‘중의원 선거 승리는 개헌 민심’이라는 명분 만들기에 나서고 있지만, 응답자의 70%는 “개헌이 지난 중의원 선거의 쟁점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함.

≫ 아베 총리가 2017년 5월에 2020년을 목표로 개헌을 제기한 이래 자민당 내에서 개헌안의 내용을 두고 조정 중에 있음.

● 아베가 평화헌법의 근간인 ‘전쟁 포기’(9조 1항)와 ‘전력 불보유’(9조 2항)를 유지한 채 9조 3항에 자위대 존재를 추가하자는 가헌(加憲)안을 제시한 데 대해, 이시바 전 간사장 등은 2항을 삭제하고 ‘국방군’ 창설을 명기한 자민당의 2012년 개헌안을 유지하자는 입장인바,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는 현재 이들 복수안을 동시에 검토 중임.

≫ 자민당은 ‘2020년에 새 헌법 시행’이라는 목표 하에 가능한 한 올해 가을까지 정기 국회에서 개헌안 발의를 한다는 입장임.

● 자민당이 개헌작업을 서두르는 이유는 2019년 4월에 일왕의 퇴위가 예정되어 있고, 7월에 치러질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의회 내의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가 위협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18년 9월의 총재선거 이전에 개헌 논의의 윤곽을 마무리 짓는 것이 아베 총리에게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임.

5. 정책적 고려사항

가. 아베 내각의 대외정책 기조 불변

» 아베 총리는 장기 집권을 염두에 두고 지지율 유지를 꾀하면서 당분간 안정적 국정 운영에 주력하는 가운데 여론의 지지가 높은 대외관계 및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미·일 동맹 기축의 정책이 계승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지난 총선거 이후 출범한 제4차 아베 내각 하에서도 한·일 관계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임.

- 외교적 성과 도출을 위해 대외관계의 안정적 관리 필요성을 감안하여 총리실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가 대외정책을 주도하면서 주변국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추구할 가능성이 큼.
- 다만 고노 외상은 한·일 의원연맹에서 활동하는 등 한·일 관계에 대한 이해가 있지만, 양국 간 현안 관련해서는 아베 내각의 기조를 존중하고 대북 강경 기조를 견지할 것으로 예상됨.
- 아베 내각 일원 중 일부 인사가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간 외교현안 관련 국내정치를 의식한 언행을 보이고, 아베 총리와 일부 내각 인사들이 대북 강경 대응을 주도할 가능성 있음.

나. 일본의 보수적 역사 인식에의 대응

» 제4차 내각에 오노데라(小野寺五典) 방위대신, 하야시(林芳正) 문부대신 등 보수적 이념 성향의 인사가 포함된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향후에도 역사 인식 문제 관련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다만, 이나다(稲田朋美) 방위대신, 마츠노(松野博一) 문부대신 등 이전 내각의 우익 성향의 인사들에 비해 이번 내각의 우익 색채는 더 두드러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일본 정계의 퇴행적 역사 인식은 탈냉전 이후 일본 사회의 총체적인 보수화를 반영한 것인바, 향후 일본 정계 재편이 이루어져도 위안부 문제 등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임을 감안하여 자민당, 공명당, 입헌민주당 등을 상대로 의원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일본 사회에서 역사 수정주의가 한층 노골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대외관계에서 일본을 제약 요인이 아니라 기회 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접근이 필요한지, 과거사 프레임에 속박되지 않는 한·일 관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됨.

다. 일본 개헌 관련 동향 주시

일본 사회에서 개헌이 터부시되던 시기는 지났으며, 탈냉전 이후 일본 사회의 변화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그 추이를 지켜보아야...

» 일본 사회에서 개헌이 터부시되던 시기는 지났으며 향후 한국은 일본 내의 개헌 논의를 빈번히 접하게 될 것인바, 탈냉전 이후 일본 사회의 변화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평화헌법의 개정 이전에 미·일 가이드 라인의 재개정, 안보법제의 성립으로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화의 제도화가 일단락되었음을 감안한다면, 일본의 개헌을 군국주의로의 회귀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일본 헌법의 개정에는 자민당과 연립 여당 내의 개헌안 합의, 국회 헌법 심사회에서 각 당의 의견 조율 및 토론,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확보 등의 관문을 통과하여야 하는바, 의회 내에서 헌법 개정 절차 논의의 본격화가 곧바로 개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에서 개헌에 대한 지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바, 개헌은 시간 문제일 수 있으며 일본 국가전략의 선택과 연동되어 있음을 이해하여야 함.

라. 대일 외교 기조로서 투트랙 어프로치 유지

≫ 위안부, 징용피해자 문제 등으로 한·일 간에 과거사 화해가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대일 외교 기조인 투트랙 어프로치의 연장선에서 역사 문제에서 대립하더라도 상호 이득이 되는 실질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협력해 나가야 함.

● 북핵 문제가 긴급현안으로 장기화되어 한·일 및 한·미·일 간 대북공조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한·일 간에 안보와 과거사 문제의 괴리에 따른 비용 관리와 대국민 설득 노력 병행할 필요가 있음.

● 국제경제 질서의 불투명성에 대비하여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을 재추진하고, 한·일 간 인력이동 촉진 및 일자리 공동시장의 제도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18년 평창올림픽, 2020년 도쿄올림픽, 2022년 베이징올림픽 등 동북아에서 연달아 열리는 올림픽을 3국이 연계하여 다양한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2018년은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20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한·일 신시대 협력 선언 2018’(가칭) 등과 같은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CONTRARIA SVNT COMPLEMENTA

상반되는 것은 보완적인 것이다

